

원주~강릉 복선전철공사 입찰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 조사 나서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가 지난해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 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4개 업

체의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4개 업체는 들리리로 참여한 구간(업체당 3구간)은 높은 가격을 써내 탈락할 수밖에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각자 발주처에 제출한 입찰사유서 내용과 양식이 똑같아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사업비가 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담합이 확인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주요 담당자의 법적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4월 담합 가능성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조사 착수가 늦

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한달 새 취업자 3만8천명 증가

도내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53.2%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67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8,000명이 증가했다.

부분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2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2.4%로 0.7%포인트 떨어졌다. 하위윤기자

원주~강릉 복선鐵 1조 담합 의혹

한진·현대·두산·KCC 공정위, 사전 합의혐의 조사

오는 2017년 완공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입찰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주~강릉 철도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업체가 공사입찰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들리리로 참가한 구간에 대해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일부 업체들은 각자 발주처에 제출한 입찰 사유서의 설명 부분과 글자크기, 띄어쓰기 등 금액을 제외한 문서 내용과 양식이 똑같아 담합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1조원에 육박(9376억원)할 정도의 대규모 공사여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업체 법인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엄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업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업체들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난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그동안 인력의 한계로 제때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조사

에 나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조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담합한 혐의로 동부건설, 코오롱위터앤에너지 등 5곳에 30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은 유일하게 2개 사업 모두 연루돼 11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연합뉴스

低價공사 부추기는 ‘표준품셈’

정부, 공사비 산정 양대 축
실적공사비 개선 나섰지만
표준품셈 항목은 하향조정
건설사 수익성 하락 불가피

정부가 공사비 산정의 양축 가운데 하나인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또 다른 축인 표준품셈 항목은 하향 조정하고 있다.

저가공사의 폐단을 없애고 시설물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표준품셈이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새로 적용하는 개정항목은 총 294개인데 이 가운데 적용기준이나 요령 등을 바꾼 항목을 제외하고 투입 물량 변화를 종전과 비교할 수 있는 50개 항목에서 이 같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10% 하락은 해당 항목 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기존에는 10명이었다면 개정 품

셈에서는 9명으로 조정됐다는 의미다. 투입 노무량에 임금을 적용해 노무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품셈 축소는 결국 공사비 하락을 가져온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품셈은 조사 때마다 15~20%가량 하락해왔다”며 “이번에는 10% 수준으로 하락 폭을 좁혔다”고 전했다.

정부가 저가공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에 나서면서, 공사비 산정의 또 다른 축인 품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항목의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표준품셈 항목이 하락하면 저가공사 폐단을 없애겠다는 제도 개선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을 정비하고 있다. 공법이나 장비 발달,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이를 표준품셈에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준품셈 정비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추진하는데 용역 결과가 항상 용역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인력 노령화가 심각한데 현장인력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을 줄였다기보다는 감소한 공사비에 맞춰 인력 투입을 줄인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로서는 적정인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공중을 생각하는 편법을 썼다고 밝힐 수도 없는 처지다.

표준품셈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항목별로 차례로 조정되기 때문에 전체 하락 폭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표준품셈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조사용역이 한 사이클을 돌았다”며 “용역기관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같은 항목에 대해 또 용역을 하면 품셈을 쥐어짜는 결과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비가 내려가고 적격심사에서 품셈 하락으로 예정가격이 내려가니 건설사들의 영업이익과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석기자 jskim@

건설업 취업자 179만6000명... 금융위기 이후 최대

통계청, 2014년 고용동향 발표... 전년보다 2.4% 증가

건설업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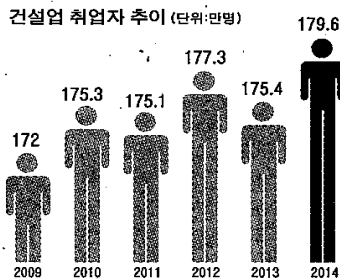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9만6000명으로 전년(175만4000명) 대비 2.4%(4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8년 181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172만명) 1년 만에 5.1% 감소하며 18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2010년 들어 175만3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11년 175만1000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했고 2012년에는 177만3000명으로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180만명에 육박했다.

작년 말 기준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2559만9000명)의 7.0%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64만5000명으로 91.6%를 차지했고 여자는 15만1000명(8.4%)이었다.



건설업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전년(42시간)에 비해 1시간 늘었다.

근로시간대별로는 36~44시간이 61만5000명(3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5~53시간 52만5000명(29.2%), 54시간 이상 34만5000명(19.2%), 18~35시간 22만명(12.2%), 1~17시간 5만6000명(3.1%) 등의 순이었다.

사·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6만5000명

(25.9%)으로 최대였고 서울시 32만6000명(18.2%), 부산시 12만5000명(7.0%), 인천시 10만5000명(5.8%), 대구시 9만1000명(5.1%), 경남도 8만8000명(4.9%), 경북도 8만5000명(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2만2000명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2506만6000명)보다 2.1% 증가한 2559만9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은 60.2%로 전년(59.5%) 대비 0.7%포인트 상승했고 이 중 15~64세 고용률은 65.3%로 전년(64.4%)에 비해 0.9%포인트 올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4만6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13만2000명) 등에서 전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고 농림어업(-6만8000명), 금융 및 보험업(-2만6000명)은 줄었다. 박경남기자